

이슈브리프 887호
(2026. 8.26)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의미와 함의

제887호

양갑용 jiayong@inss.re.kr



국문초록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외교부장이 2026년 8월 19일~20일 한국을 방문했다. 왕이 부장의 방한은 약 5년여 만으로 조현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예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전략대화 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왕이 방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한중관계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점이다. 왕이 부장은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치지 않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AI·디지털경제·녹색전환첨단장비 등 신산업 협력, 청소년·언론·스포츠·싱크탱크·지방 등 인적·사회적 교류 확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2027년 한중수교 35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전방위적인 교류를 강화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전략적 자율성'과 미·중 등 주요국과의 관계 병행을 요구했다. 이는 중국이 한중관계 개선을 양국 관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속 한국의 외교적 선택과 연결해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문제에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남북대화와 평화공존을 지지했지만, 비핵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전환을 한반도 긴장 완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결국 이번 방한은 한중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됐음을 선언한 자리가 아니라, 양국이 관계를 다시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상호 '눈높이 맞추기'를 본격화한 계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를 단순히 중국의 요구에 응하는 계기로 활용하기보다, 중국의 대(對)한국 관계 개선 의지를 한국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필요한 중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중국, 한국, 왕이, 방한, 국익, 이해관계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외교부장이 2026년 8월 19일~20일 한국을 방문했다. 왕이 부장의 방한은 약 5년여 만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예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전략대화 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방한은 형식적으로는 지난해 조현 장관의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을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근 한중 정상 간 상호 방문으로 조성된 관계 개선의 흐름을 외교·안보 및 실무협력 차원으로 확장하는 자리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은 고위급 소통 확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경제·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한 바 있지만, 이번 방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한중관계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점이다.

한중관계 : ‘정상화’에서 ‘새로운 단계’로

왕이 부장은 조현 장관과의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상호 방문이 한중관계의 미래 발전에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예방에서도 한중 정상의 상호 방문이 양국 관계 개선에 중요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현재의 한중관계 개선을 정상 간 친교 수준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관계 재편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왕이 부장이 청소년·언론·스포츠·싱크탱크·지방 등 5개 분야의 교류를 강조하면서 양국 간 ‘여론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이 한중관계의 안정성을 고위급 정치 관계에만 의존하기보다 경제·사회·인적 교류를 복원해 관계의 사회적 기반까지 넓히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27년 한중수교 35주년을 계기로 한 고위급 교류 및 전방위적 교류 확대 역시 같은 맥락이다. 중국으로서는 수교 35주년을 한중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가속화를 비롯해 AI, 녹색전환, 디지털경제, 첨단장비, 실버경제 등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이는 한중 경제 관계가 과거와 같은 제조업·교역 중심의 구조만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양측의 현실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한국에 대한 기회로 강조하면서 한중 경제 관계를 상호보완적 ‘이익공동체’로 재정립하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다만, AI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는 과거의 경제협력과 달리 미·중 전략경쟁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양국이 협력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해서 실제 협력이 자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향후 한중 경제협력의 핵심 과제는 미·중 경쟁이라는 외부 제약 속에서 양국이 어디까지 실질적인 협력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있다.

적극적인 ‘상호 눈높이 맞추기’

이번 방한을 평가할 때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양국이 서로의 관심과 기대를 폭넓게 확인했다는 점이다. 왕이 부장은 방한 기간 조현 장관,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차례로 만났다. 외교·

안보를 포괄하는 연쇄적인 고위급 접촉을 통해 양국 현안을 폭넓게 펼쳐놓고 서로의 입장과 기대를 탐색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비교해서 이번에는 왕이 부장이 한반도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2025년 회담 당시에도 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지만, 이번 방한에서는 남북 평화공존, 대화 재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등 중국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외교장관 회담을 4시간가량 진행하고 대통령 예방과 안보실장 회담까지 연이어 가진 것은 양국이 관계 개선을 단순히 외교적 수사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찾아보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방한은 ‘한중 관계가 정상화됐다’라는 의미보다는 양국이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보기 위해 서로의 눈높이를 맞춘 첫 번째 본격적인 시험대라는 의미가 더 크다.

중국이 제시한 협력 의제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FTA, 첨단기술, 공급망뿐만 아니라 청소년·언론·스포츠·싱크탱크·지방 등 사회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관계의 제도적·사회적 기반을 다시 구축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전략적 간극이 존재

관계 개선 분위기가 강하게 조성됐다고 해서 한중간 전략적 이견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왕이 부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중국이

원하는 한중관계의 방향이 무엇인지가 이번 방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왕이 부장은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실현하고, 진영 대립에 가담하지 않으며, 중국·미국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상충 없이 병행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에게 ‘편승’이 아니라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중관계 개선을 단순히 양자관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더 큰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으로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한국의 외교적 선택은 한국의 국익과 안보 환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외교적 선택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한국 외교에 중요한 전략적 공간을 제공한다. 따라서 핵심은 ‘중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을 어떻게 한국의 국익 확대에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번 방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볼 대목은 한반도 문제이다. 왕이 부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한반도 접근에는 분명한 한계도 확인된다.

첫째, 비핵화가 중국의 핵심 메시지로 드러나지 않았다. 둘째,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연결하면서 미국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셋째, 중국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역할이 북한에 대한 설득이나 북미대화 중재 등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현재 시점에서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이는 중요한 차이다. 중국이 당장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는 순간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 외교의 과제는 중국에 역할을 요청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중국이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반응적 대중 외교’에서 ‘선제적 대중 외교’로

이번 왕이 방한이 한국 외교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대중국 외교의 접근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대중국 외교는 중국의 정책 변화나 특정 현안에 대응하는 방식이 강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반응적·수세적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중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동시에 그것을 한국의 국익과 연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한중관계의 안정, 한국의 우호적 대(對)중 정책, 미·중 간 균형, 경제협력, 인적교류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은 이를 한반도 긴장 완화, 남북대화 여건 조성, 북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공급망

안정, 한국 기업의 활동 여건 개선, 첨단산업 협력 등과 연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이해관계를 묶어 상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 왕이 방한은 한국이 중국에 ‘다가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한국의 외교적 지렛대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향후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향후 한중관계의 다음 시험대는 APEC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단순히 관계 개선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2027년 수교 35주년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 성과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왕이 부장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수교 35주년은 향후 한중관계의 방향을 판단할 중요한 기준점이다. 2027년을 기념행사 중심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FTA·경제협력·인적교류·전략대화·한반도 협력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 2027년은 한중관계 개선의 ‘성과를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 한다.

향후 북한의 대화 재개, 북미 관계 변화,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 과정에서 중국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가

중요하다. 중국이 단순히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남북·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의 국익을 중국의 이해관계와 연결하기

왕이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은 한중관계가 새로운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외교적 이벤트다. 그러나 이를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로 규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이번 방한에서 확인된 것은 오히려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 서로의 기대와 요구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협력, FTA, 첨단산업, 인적교류, 사회적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에 전략적 자율성과 주요국 관계의 병행을 요구했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중국은 역할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그 역할은 아직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비핵화보다는 대화와 평화공존,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번 방한의 본질은 ‘중국이 한국에 가까워졌다’라는 데 있지 않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데 있다. 이것이 한국 외교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목표로 삼을 필요가

없다. 또한 중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이유도 없다. 대신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현재의 외교적 공간을 활용해 한국의 국익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향후 한중관계의 관건은 ‘얼마나 가까워지는가’가 아니라 ‘가까워진 관계를 무엇에 활용할 것인가’이다.

이번 왕이 방한이 한중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면, 11월 APEC 정상회의와 2027년 수교 35주년은 그 출발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국 외교는 중국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대중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의 이해관계를 한국의 국익과 연결해 중국의 행동을 선제적으로 유도하는 적극적 대중 외교로 한 단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사무에서 실무 역할을 하는 왕이 부장 방한에 동행한 화춘잉 부부장, 선민취안 아주사 사장 등 중국 외교부 관원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